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8. 30.(월)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강원도 해양항만과	담당자	• 과장 황준성, 서기관 구본찬, 주무관 박봉석 • ☎ (044)200-5260, 5263, 5264 • 과장 권용범, 사무관 임순형, 주무관 박재호 • ☎ (033)660-8370, 8372, 8373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해수부, 8월 31일(화) 강원도에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8월 31일(화) 14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강원지역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지역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위원 25명)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더욱 합리적인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용범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은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강원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위원(25명)과 정부·지자체 담당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며,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8.31.(화) 14:00/ 강원 강릉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 2층 재난상황실
- 참석자 : 지역협의회 위원(25명),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1

강원 해양용도구역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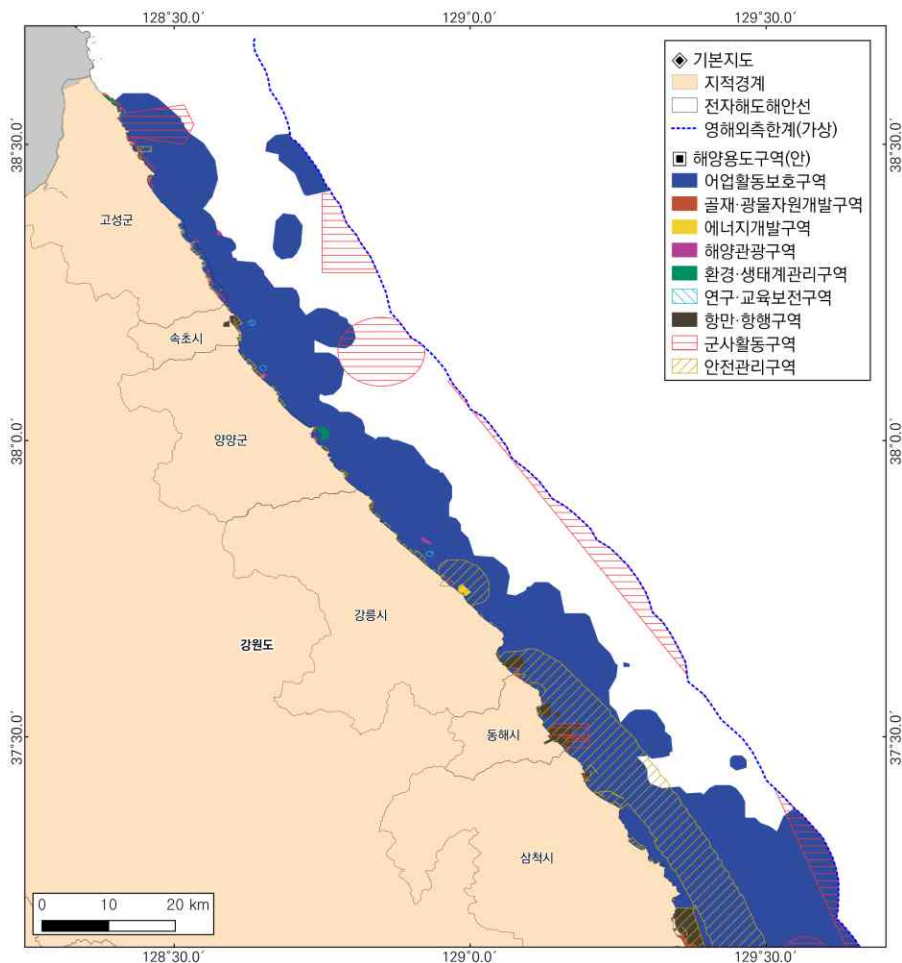
-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

※ 미지정 해역 :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생태, 사회·경제적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 용도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공간

* 면적은 용도구역 조정, 측정 방식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면적(km ²)	비율(%)
총 합	4,321.2	100.0
어업활동보호구역	2,250.4	5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5	0.1
에너지개발구역	2.6	0.1
해양관광구역	7.9	0.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5.6	0.1
연구·교육보전구역*	2.4	0.1
항만·항행구역	53.2	1.2
군사활동구역*	479.5	11.1
안전관리구역*	588.5	13.6
미지정해역	1,667.5	38.6
중첩(안전/군사/연구)	742.4	17.2

* 중첩 지정 가능 용도구역



<강원 해양용도구역(안)>

* 지역협의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법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해양공간 통합관리** :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것

□ 추진 배경

-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도입 추진**
 - *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없이 개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해오면서 갈등(이용행위간, 이용-보전간) 유발·심화 및 해양 난개발 우려
 - **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84-5)로 선정
- **국제사회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 유엔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3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 발표’(17.3, UNESCO IOC), 현재 약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 수립 중

□ 해양공간계획 주요내용

- (법·제도 마련) 「**해양공간계획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19.4)
 - (관련 지침)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등 5종 제정(‘19.6)
 -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수립 고시(‘19.7.)
-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특성평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계획
 - * 수집·분석된 자료·정보로 해양이용·개발·보전가치를 과학적 평가하여 핵심활동 선정·용도별 상충분석 등을 실시하는 평가
 - (수립주체) EEZ, 항만구역(해수부장관) / 그 외 해양공간(시·도지사)
 - *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기준, 해양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 *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계관리, 해양관광, 에너지개발, 골재·광물, 항만·항행, 연구·교육, 안전관리, 군사활동

참고3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

구분	주체	세부 절차	비고
관리 계획 (안) 작성 과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사전 관리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참여·협력 기반 마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설정
		↓	
		대상 해양공간 범위 설정	
		↓	
		기존 현황 분석 미래 수요 분석	해양공간관리 현안 확인 핵심활동 분석 및 지도화 중요 생태지역 분석 및 지도화 향후계획 및 정책수요 분석
		↓	
관리 계획 승인 과정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	
		해양용도구역(안) 마련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의견반영	주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 공청회 결과 -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결과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결과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	
		↓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공보 고시 관리계획 수립 공간정보 제출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등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재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후)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시·도지사	일반열람	